

“국세 감소 지방재정 위기” 민주당에 지원 요청

김영록 지사 민주 지방정부 긴급대책 영상회의 참석
지방교부세 법정률 5% 상향·전남권 의대 설립 등

전남도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국세 감소에 대한 대책과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록 지사는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민주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 입이 무려

40~53%나 차이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로 도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 상향 조정(20%→60%)’, ‘지방 교육재정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의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의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호 기자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광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모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단계별로 관련성이 있는 광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을 정 대표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법조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전문가’ 김명진
“광주의 일꾼 되겠다” 출마선언



“국회전문가”로 불리는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7일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일꾼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광주 서구 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0명 안팎에 이르는 광주·전남 총선 입지자 가운데 공식 출마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25년 간 청와대, 국회, 여·야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 공기업 등에서 국정 전반을 경험하고, 안목을 길러온 국회전문가로서, 국회에서 일어난 입법, 예산 업무는 누구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며 “준비된 국회전문가”가 이제 “광주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내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되는 해”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는 ‘뉴디 정치’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호남정치가 한국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총선·대선 승리의 해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과 박수를 받는 정치로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 4기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공동결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 9·19 합의로 파괴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군사적 조치 회복 중

우리 군 당국은 지난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북한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경계초소(GP)를 복원하고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 동부지역을 촬영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북한이 GP를 다시 복원하는 장면과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내 GP 11곳 가운데 10곳을 파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겠다고 사실상 9·19 파기를 선언한 이후 그 첫 절차로 파손한 GP 복구에 나선 것이다.

다만 현재 짓고 있는 GP는 목재로 만드는 가건물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이 예전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GP를 만들 것인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재 몇몇 경계초소를 다시 짓고 있는 것을 우리 감시장비를 통해 확인했다”며 “감시소는 필수시설인 만큼, 그동안 파기했던 모든 감시소를 다시 복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비반총포(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들여온 장면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군이 야간에도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것 또한 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밝힌 것대로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비반총포와 같은 유사 무기가 일부 GP에서 식별됐다”며 “24시간 다 볼 수 없어 모든 GP에 중화기를 반입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안보였을 뿐이지 다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안착했고, 항적을 분석한 결과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총 징역 5년 구형

고발장 전달 혐의…“국민 신뢰 무너뜨린 국기문란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기소된 손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수사에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 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문란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최종의견을 전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



관 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용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

현역 페널티·인재 영입 등 광주 정치권 ‘술렁’

현역 평가 하위 10%, 경선서 30% 감점…인재 영입 초읽기

제22대 총선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을 중심으로 현역 페널티와 인재 영입,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유·불리 쟁점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엔 친이낙연계(친낙계) 원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27일 광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동안 자당 소속 현역의원들로부터 현역 평가서류를 제출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의정, 기업, 공익, 지역 등 4개 분야별로 활동내역을 평가해 계량화한 뒤 이르면 연내 공천심사위원회와 개별 의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12월 초에는 권리당원과 시민 대상 여론조사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당내 경선에서 하위 0~10%는 득표수의 30%, 하위 10~20%는 득표수의 20%를 각각 감산기로 했다. ‘하위 20% 일괄 20% 감산’ 조항이 강화돼 페널티폭이 확대된 셈이다.

예컨대 하위 10% 현역과 가산점(신인, 여성, 장애인 등이 주어지는 원의 인사가 경선에 맞붙어 현역이 50점, 원의 인사가 30점을 획득할 경우 현역은 30% 감점으로 35점,

원의인사는 20% 가산으로 36점을 얻게 돼 현역 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은 광주 7명, 전남 10명으로, 하위 10%를 적용하면 광주 1명, 전남 1명, 20%를 적용하면 광주 1~2명, 전남 2명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현역, 특히 비명계 공천 배제를 위한 조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재 영입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가 1차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늦어도 12월 초에는 1, 2차 인재영입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가 우선 영입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인재 영입 대상 지역구 명단도 나오고 있다.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여부에 따라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소수 정당과의 통합, 이를 통한 전국구 인사의 전략공천도 가능해 선거제 개편도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낙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실천행동’이 전날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서 호남 출신 원내·원의 인사들의 동행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도기 기자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청문보고서 채택

시의회 “경험·안정성 있으나 전문성·리더십은 물음표”

광주시의회가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랜 공직경험과 안정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성과 리더십에는 물음표를 찍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특위 위원 7명 전체 명의로 된 A4 용지 18장 분량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최종의견을 통해 7건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3건은 장점, 4건은 단점들이다.

특위는 “37년 공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국제행사나 부단체장 경험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측면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장과 시책흐름을 빠르게 판단해 적시 대응하고, 무난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

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시설 운영경험이 미흡하고 큰 조직을 경영할 비전도 부족하다”며 “환경 분야 학위 취득이나 연구실적도 없고, 기관장으로서의 철학, 정치적 판단력, 관리형 리더십도 부족해 큰 일도 못하고 큰 사고도 못치고 무난히 임기는 마칠 인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청문보고서는 강기정 시장에게 전달되고 강 시장은 장·단점을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광주시 교통안전과장, 민선6기 첫 대변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동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與 “인요한 ‘이준석 부모’ 발언 K꾼대”

이준석 “패드립이 혁신인가”…천아용인 “존중 없는 K꾼대”

여권은 27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한 강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준석이는 도둑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일제히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나야 사신 먹어서 당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상유취(口商乳臭)라고 양 김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대표가 연상된다”며 “이준석은 벼룩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것”이라고 적었다.

재선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인을 비판하기 위해 부모를 끌어들이는 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다.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은) 싸우자고 하는 것이다. 가족의 명예에 대한 목욕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옳

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인 위원장을 향해 ‘꾼대’, ‘패드립’ 등으로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같은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인만 평가하거나 비판해도 되는데 전문 용어로 ‘패드립’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정치의 영역에서, 특히 공개된 당원들 앞에서 이렇게 부모님 욕까지 한다는 것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나를 대표 존재감이 큰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의 전직 당대표까지 했었는데 ‘준석이가 도둑이 없어’, ‘부모님이 잘못 키운 것 같다’는 너무도 존중이 없는 그런 ‘K꾼대’스러운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아랫목 얘기하면서 시 월권 얘기하고 나랏님 말씀하시던 그때 그 시절의 눈으로 요즘 분들을 바라보시면 저희 당은 정말 미래가 없어진다”고 일갈했다.